

거꾸로 가는 선거구획정안



하 태 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안암법학회 회장
- 참여연대 공동대표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아직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 예비후보를 알리는 대형 외벽 현수막이 유권자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너도 나도 '지역구의 일꾼',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역 민원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문구가 대부분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현수막에는 지역개발사업을 유치했다는 자랑이 넘쳐나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 초년병은 큼지막한 사진 밑에 지역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맹세로 가득하다. 국회의원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유독 지역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낮춰버린다. 마치 지방의회 의원인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니다. 엄연히 국민의 대표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에는 헌법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순득표율로만 계산해 보면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도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지역구 유권자 대비 30%정도의 득표율로도 당선되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도 떨어진다.

2등이 얻은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제도 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말할 수도 없다.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는 선거, 의석에 반영되지 못한 유권자 표의 불비례성이 큰 선거제도, 1등만 여의도행이 보장되는 선거에서는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계층이 자신들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 대변인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와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들어주고 권익을 대변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엇그저서야 늦장 합의한 획정안은 이와는 거꾸로다.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선거구는 현행보다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든 47석이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욱 좁아졌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이는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회가 개혁 논의의 주체가 된 결과다.

1등만 살아남는, 1등에게 던진 표만 값어치를 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는 지역의 일꾼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임을 새겨야 그나마 소중한 한 표 행사가 될 수 있다. 우리 지역구에 다리를 놓아 주었는지, 예산폭탄을 따왔는지, 지역에 얼굴을 더 내밀었는지, 자기가 아니라 후보가 속한 정당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 내고 과연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지를 따져 보고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법률신문 인용)